

내란 국조특위, '與·尹·김용현' 불참에 구치소 청문회 불발

김용현 “재판 준비 등으로 바빠 거부”
법원 폭동 청년에 영치금 보내기도
尹, 출석 요구서 등 무시… 침묵 일관
불출석 대해 제재 조치 검토할 것
오늘 3차 청문회 예정… 출석 촉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인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 침해하고



내란국조특위 안규백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앞줄 왼쪽)이 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위원들과 함께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뉴시스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할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특위 위원에게 “특사경 팀장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

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변호인 접견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5명으로 인

원을 줄여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김 전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중에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감된 60여명의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병도 특위 간사는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소환 노력을 다했다.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견 단

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겁한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로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핵심 수출기업 연구소장 국회 초청

“트럼프 2.0 시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AI 지원 등 필요”

공통적으로 인력 고도화 문제와 불확실성 속 정부 정책 중요 지적
무렵 통계 등으로 美 조야 설득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나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에서 당내 경제 관련 위원회 및 기업·경제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건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

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번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

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지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 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도록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전력 없이 AI 혁명 없어”… 전력망특별법 처리 촉구

고덕변전소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여야 이견 좁혀 국회 통과 채비 마쳐

국민의힘이 5일 경기 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전력 없이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없다”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삼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

은 이날 오전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고덕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고덕변전소는 반도체 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삼훈 정책위의장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전력 면에서 부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긴장하고 전력 수요 공급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미래먹거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현재 반도체 특별법이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면 에너지 3법을 먼저 통과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3법 중 그래도 여야가 가장 이견을 좁히고 국회를 통과할 채비를 마친 것이 국가기간전력망법”이라고 전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